

공개



의안번호	제 3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1. 18. (제1차)	

주은테크(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 18.

## 1. 의결주문

주은테크(주)의 제4기(2018.1.1.~2018.12.31.)와 제5기(2019.1.1.~2019.12.31.)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별지1과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은테크(주)의 제4기(2018.1.1.~2018.12.31.)와 제5기(2019.1.1.~2019.12.31.)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조치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안*
OOO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2.7백만원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징금 2.7백만원

\* 회사의 경우 최근 재무제표('21.12.31.) 상 ① 당기순손실(4,078백만원), ② 완전자본잠식(3,141백만원)이 발생하여 과징금 부과 대신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동 규정 [별표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가.(1)(가)]

### 나. 위반내용

#### (1) 회사

#####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 회사는 제4기(2018.1.1.~2018.12.31.)와 제5기(2019.1.1.~2019.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8년 5,408백만원, ‘19년 2,774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과 관련하여 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간(‘17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수익을 잘못 인식하였고, ② 외부감사대상이 된 기간(‘18년 및 ‘19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합의된 계약금액이 아닌 거래처에 제안한 견적금액으로 수익을 잘못 측정하는 등의 오류로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제4기(‘18년)	제5기(‘19년)
매출 과대계상	3,593	953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4,781	△6
자기자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과대	3,003	1,815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188	959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5	2,774

## (2) 감사인

###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인은 제4기(2018.1.1.~2018.12.31.)와 제5기(2019.1.1.~2019.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8년 5,408백만원, ‘19년 2,774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과 관련하여 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간(‘17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수익을 잘못 인식하였고, ② 외부감사대상이 된 기간('18년 및 '19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합의된 계약금액이 아닌 거래처에 제안한 견적금액으로 수익을 잘못 측정하는 등의 오류로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인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및 총수익금액의 정확성,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제4기('18년)	제5기('19년)
매출 과대계상	3,593	953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4,781	△6
자기자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과대	3,003	1,815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188	959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5	2,774

#### 4. 참고사항

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2022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22.10.18.)

다. 2023년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심의필(2023.1.12.)

라. 관계법규(붙임)

(별지1)

## 주은테크(주) 대표이사 000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은테크(주)의 대표이사 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000 [주은테크(주)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 00. 0.
- 주소 : 0000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000000000000)

###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 주은테크(주) 대표이사 000에 대하여 과징금 2,700,000원을 부과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주은테크(주)(이하 '회사')는 제4기(2018.1.1.~2018.12.31.)와 제5기(2019.1.1.~2019.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과 관련하여 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간('17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수익을 잘못 인식하였고, ② 외부감사대상이 된 기간('18년 및 '19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합의된 계약금액이 아닌 거래처에 제안한 견적금액으로 수익을 잘못 측정하는 등의 오류로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제4기('18년)	제5기('19년)
매출 과대계상	3,593	953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4,781	△6
자기자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과대	3,003	1,815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188	959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5	2,774

###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 7의 조치 등의 기준(이하 "양정 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 등의 가중·경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7, 제5장(회계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9, 제16장(수익) 문단 16.24와 문단 16.39, 문단 16.44, 문단 16.47

-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별지2)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

- 주무공인회계사 : XXX
- 주사무소 소재지 : □□□ □□□ □□□ □□ □□(□□□□, □□)

###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에게 과징금 2,700,000원을 부과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공인회계사감사반(제□□□호)(이하'감사반')은 주은테크주의 제4기(2018.1.1.~2018.12.31.)와 제5기(2019.1.1.~2019.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18년 5,408백만원, '19년 2,774백만원)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과 관련하여 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간('17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수익을 잘못 인식하였고, ② 외부감사대상이 된 기간('18년 및 '19년)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합의된 계약금액이 아닌 거래처에 제안한 견적금액으로 수익을 잘못 측정하는 등의 오류로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 매출 및 매출원가,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인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및 총수익금액의 정확성,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제4기('18년)	제5기('19년)
매출 과대계상	3,593	953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4,781	△6
자기자본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과대	3,003	1,815
당기순이익 과대(△과소)계상	△1,188	959
자기자본 과대계상	1,815	2,774

#### 나. 근거법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함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기준)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붙임)

## 관 계 법 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⑥ (생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생략)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제35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제5조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제시한 최근 사업연도(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감사인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상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a.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b.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c.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미만인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안전상정 요청 등) ① 감독원장은 제26조제2항의 각호의 사항(제5호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증선위에 안전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증선위에 안전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을 증선위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선위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원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증선위에 안전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53조 (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③ (생략)

제54조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예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③ (생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16, 2005.6.29, 2010.5.27>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

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 (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⑥ (생략)

**제67조 (감리업무의 위탁)** ① 영 제9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3. (생략)

② (생략)

③ 증선위는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감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해당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제75조 (권한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위탁한다.

1.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집행
2. 영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집행
3.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4. 제64조에 따른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와 사후관리 집행
5. 제33조제2항,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⑤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감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8. (생략)

**제26조 (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 나. 주권상장법인
    -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⑧ (생략)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 등의 가중·경감
-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⑤ (생략)
-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⑦ (생략)

**제28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2.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1조 (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 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략)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④ (생략)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⑧ (생략)

**제42조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별표 7] 조치등의 기준

1. ~ 2. <생 략>

3. 조치등의 가중·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생 략>

나. 감경사유

1) ~ 4) <생 략>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 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 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 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9)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 <생 략>

4. ~ 5. <생 략>

##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1. 기준금액

-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 2. 부과기준율

-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2 이상 ~ 2.6 미만	15%	350%
1.8 이상 ~ 2.2 미만	10%	250%
1.4 이상 ~ 1.8 미만	5%	150%
1.4 미만	2%	50%

-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항목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가중치		
위법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li> <li>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li> <li>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li> <li>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li> <li>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li> </ul>
	감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li> </ul>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사 인		<div>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div> <div>·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div> <div>·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div>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위 법 행 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정 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3.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과 기본과징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4)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부칙<제2019-13호,2019.4.3.> 제2조 (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19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 제16장 (수익)

16.24 이 절은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6.25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본다.

- (1)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 (2) 각 자산에 대해 독립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발주자와 건설사업자는 각 자산별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부가 가능하다.
- (3)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인식이 가능하다.

16.39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6.44 진행기준하에서 공사수익은 그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한다. 공사원가도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6.47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 「회계감사기준」

###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심사감리본부
연락처	02-2100-2692	02-3149-0358